
주요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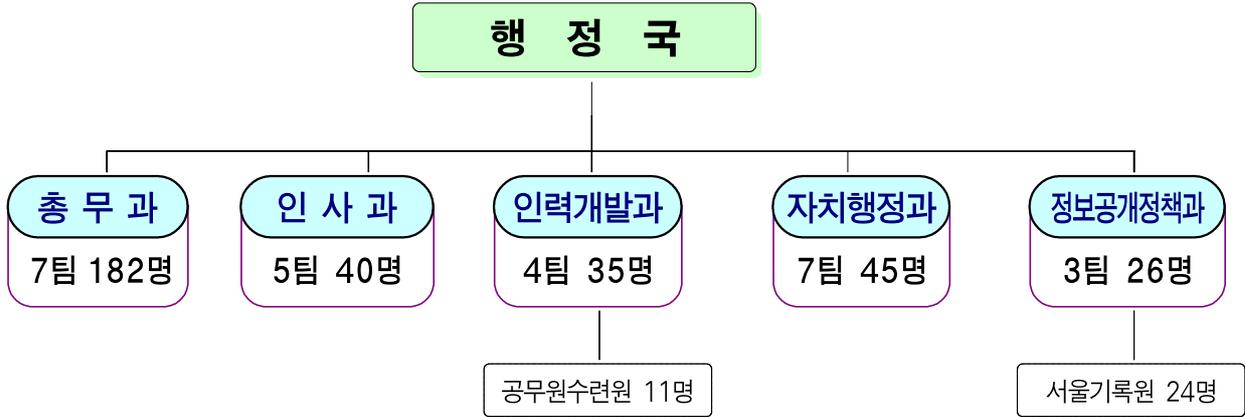
2022. 2.

행 정 국

I. 일반 현황

□ 조직 및 인력 : 5과 2사업소 363명

(기준 : '22. 1. 31.)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06. 1. 18. 설립) 2부 5팀 36명

□ 과별 담당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방호, 차량·통신시설 관리, 서울광장 운영 ○ 당직, 보안, 의전, 식당·회의실 운영, 청사투어·전시 프로그램 운영
인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인사관리 및 충원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운영 ○ 보수 및 수당, 복무관리, 표창,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무원 관리
인 력 개 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교육훈련, 후생복지, 직원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공무원단체 지원, 공무원수련원 지도·감독 등
자 치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동 행정 총괄·조정, 자치구 재정지원·조정, 재택치료 체계구축 운영 ○ 주민등록, 선거, 자원봉사, 주민자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정 보 공 개 정 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제도·정보소통광장 운영, 기록물 관리, 기록정보 수집 ○ 기록관·기록문화관 운영,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서울기록원 지도·감독 등
서 울 기 록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기록물 보존·관리, 기록물 전시 및 열람 등 대시민서비스 제공 ○ 시, 자치구 등 관할공공기관 기록관리 정책수립 및 지도점검 등

□ 세입·세출 예산현황

○ 세입총괄

(기준 / 단위 : '22. 1. 1. / 천원, %)

구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1,274,197,879	20,402,003	△1,253,795,876	△98.40%
세 외 수 입	12,182,121	17,283,783	5,101,662	41.88%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088,431	1,258,149	169,718	15.59%
공 유 재 산 임 대 료	543,357	648,166	104,809	19.29%
사 용 료 수 입	494,950	498,674	3,724	0.75%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560	4,482	△78	△1.71%
기 타 사 업 수 입	20,727	13,631	△7,096	△34.24%
기 타 이 자 수 입	24,837	93,196	68,359	275.23%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1,077,123	16,011,480	4,934,357	44.55%
불 용 품 매 각 대 금	22,593	18,423	△4,170	△18.46%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1,510,034	4,071,587	2,561,553	169.64%
보 조 금 반 환 수 입	1,734,020	801,135	△932,885	△53.80%
그 외 수 입	7,723,155	11,050,479	3,327,324	43.08%
지 난 연 도 수 입	87,321	69,856	△17,465	△20.00%
지 방 행 정 제 재 · 부 과 금	16,567	14,154	△2,413	△14.57%
변 상 금	16,567	14,154	△2,413	△14.57%
특 별 교 부 세	395,271	0	△395,271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1,261,619,284	3,089,597	△1,258,529,687	△99.76%
보 전 수 입 등	1,203	28,623	27,420	2,279.30%

○ 세출총괄

(기준 / 단위 : '22. 1. 1. / 천원, %)

구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5,969,099,103	4,147,360,593	△1,821,738,510	△30.52%
사업비	5,819,981,262	3,983,281,163	△1,836,700,099	△31.56%
총 무 과	38,454,590	36,159,816	△2,294,774	△5.97%
인 사 과	8,482,320	8,334,565	△147,755	△1.74%
인 력 개 발 과	52,369,638	51,566,506	△803,132	△1.53%
자 치 행 정 과	5,708,727,827	3,873,404,832	△1,835,322,995	△32.15%
정 보 공 개 정 책 과	6,558,580	8,358,510	1,799,930	27.44%
공 무 원 수 련 원	819,008	886,954	67,946	8.30%
서 울 기 록 원	4,569,299	4,569,980	681	0.01%
행 정 운 영 경 비	138,392,235	154,864,002	16,471,767	11.90%
재 무 활 동	10,725,606	9,215,428	△1,510,178	△1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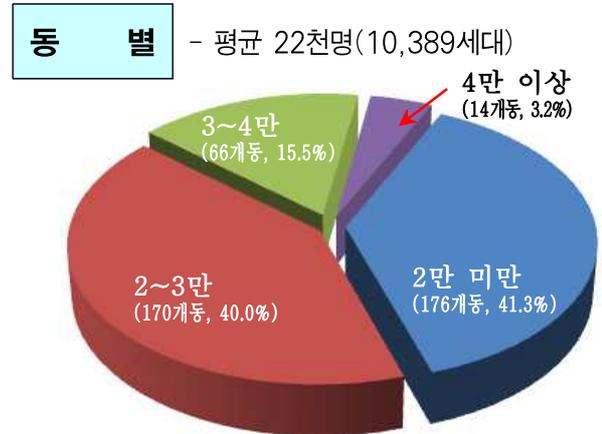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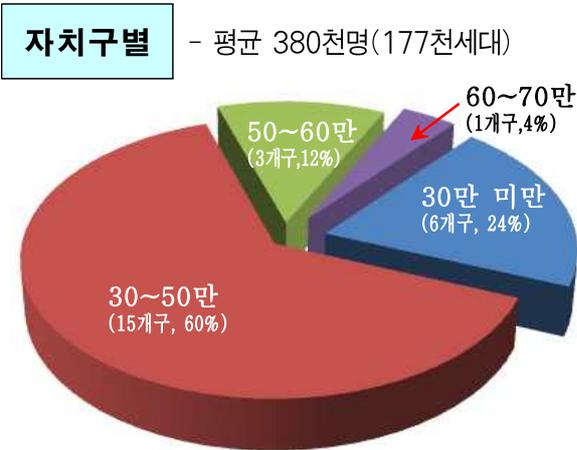
□ 자치구·동 행정여건

(기준 : '22. 1. 31.)

총괄

- ▶ 면적 ----- 605.25km² (전 국토의 0.6%)
- ▶ 인구 ----- 9,509,458명 (4,426천 세대)
- ▶ 조직 ----- 25자치구 426동 (12,854동, 96,491반)
- ▶ '22년 예산 ----- 20조 5,624억원 (재정자립도 평균 29.4%)

○ 인구현황



※ 최대 : 송파구 66만명(282천세대)
 최소 : 중 구 12만명(63천세대)

※ 최대 : 은평구 진관동(55,798명)
 최소 : 강동구 둔촌1동(133명)

○ 행정인력 : 정원 36,776명(자치구 평균 1,471명)

- 구청(25) : 정원 26,387명 (평균 1,055명)
- 동 주민센터(426) : 정원 9,620명 (평균 23명)
- 구 의회(25) : 정원 769명 (평균 31명)

○ '22년 예산규모 : 20조 5,624억원(자치구 평균 8,225억원, 본예산)

※ 최대 : 강남구 1조 2,001억원, 최소 : 종로구 4,908억원

◆ **조정교부금 : 3조 8,123억원('21년 본예산 3조 2,785억원 대비 16.3% 증가)**

II. 주요 업무보고

1.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업무효율 향상 지원

- ①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②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
- ③ 장기국외훈련 운영개선
- ④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치구 확산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체계 구축

- ①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
- ②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 ③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 강화

3. 지방분권 강화 및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 ①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
- ②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 ③ 서울시-서울시의회 간 인사운영 협약체결
- ④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효율적 추진
- ⑤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확대
- ⑥ 디지털 기반 공공아카이브 운영 강화

1.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업무효율 향상 지원

①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②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

③ 장기국외훈련 운영개선

④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치구 확산

1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청사 추가 확보와 노후·열악한 사무환경 개선 추진

□ 추진방향

-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핵심부서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공간 적기 지원**
- 업무공간 재조정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

□ 추진내용

- 조직개편과 연계, 임차청사 확보·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
 - 본청 주변 임차청사 추가확보·공간 재배치를 통한 **1인당 업무공간 확대**로 업무효율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 ※ ('21년 확진자 현황) 1청사 86명(57.7%) > 본관 43명(28.8%) > 2청사 20명(13.5%)
 - 1인당 업무공간 면적 '21년 6.3m² → '22년 6.5m² 확보
 - ※ 청사 법적 기준면적 127,402m², 현재 청사 사용면적 118,983m²

〈 주요 청사현황('22. 1. 1. 기준) 〉

▷ 3개 청사, 33개 실·본부·국 5,123명 근무

본관 청사	서소문1청사	서소문2청사
		
행정국,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등 14개 실·본부·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기후환경본부 등 9개 실·본부·국	경제정책실, 주택정책실, 평생교육국 등 10개 실·본부·국
63개 부서, 2,042명 입주	52개부서, 1,818명 입주	51개부서, 1,263명 입주

○ 서소문청사 5동(감사위원회) 사무환경 개선(~'22. 5월)

- 노후 전기·통신·기계설비 교체 및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사무환경 개선
 - ※ 공사 중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층별 공정분할 시행(1차 4·5·7층, 2차 1·2·3·6층)
- 효율적 공간배치로 직원 수요가 많은 회의실·휴게공간·탕비실 등 추가 확보



〈바닥재·블라인드 설치〉



〈사무집기 신규교체〉



〈휴게공간 설치〉



〈탕비실 설치〉

2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추가업무 수행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휴식지원]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활력 회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강화**
- [복지지원] **주거 등 생활 지원**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건강지원] 건강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체·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 추진내용

① 휴식 지원

- [법인콘도] 이용수요 증대에 따른 **일반 휴양시설 지원 확대**
 - ('21년) 10,000박 → ('22년) 15,000박(1박당 100천원)
- [연수시설] 민간 휴양시설을 활용한 **연수시설 확충**
 - 위치/규모 : 제주지역 2곳(100실) ※ 직원 선호도 조사('21. 9.) 반영
 - 운영방법 : 객실 및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1년, 市 독점 사용)
 - 향후계획 : '22년 사업추진 결과 효과 분석 후 확대 검토

총 임차규모		즉시 추진('22년)		효과 분석 후 확대
200실	:	100실 이내	→	200실
직원 선호지역		제주지역		남해안 지역 등

- [여가지원] 다양한 문화 활동 수요대응을 위해 **여가지원 콘텐츠 다양화**
 - 공연 관람 지원 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으로, 다양한 수요 충족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다양화로 선택폭 확대(현재 1종만 운영)

② 복지 지원

- **[전세지원]**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기준 변경**으로 보증금·한도 상향
 - 전세보증금 상향* : ('21년) 5억 5천만원 → ('22년) 6억 4천만원
 - * '21. 10월말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 반영하여 한도 상향
 - 1인 가구 지원한도 상향 : ('21년) 5천만원 → ('22년) 1억원
- **[임대지원]** 市 보유 임대아파트(42채) **임대기간 연장**으로 안정적 주거지원
 - (현행) 총 3년(2년+1년) → (변경) 총 4년(2년+2년)
- **[보험지원]** **단체보험 보장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일하는 근무환경 마련
 - '22년부터 암 및 2대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10백만원 지급

③ 건강 지원

- **[힐링센터]** 정신건강 전문가(정신건강전문의)를 영입, **심리상담 전문성 제고**
 - (인적) 재위탁 협약 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영입
 - (양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의 상담 기회 확대(월 2회 → 주 2회)
 - (질적) 전년도 이용자 피드백 실시로 '심리적 고위험군' 관리 강화

【 심리적 위험 단계별 관리 방안 】

단계	일반	관심	경고	위기
판별 기준	단순히 정보가 필요한 상태	→ 도움 필요한 상태	→ 최근 3개월 이내 약 복용 등 심리적 위기상태	→ 자살시도 등 심리적 심각한 위험 상태
개입	→ 필요 정보 제공 및 연계	→ 8회기 이내 일반적 심리상담 안부콜(3개월 1회)	→ 8회기 이상 심층상담 안부콜(주 1회)	→ 긴급상담 및 위기개입 필요시 수시 안부콜

- **[헬스케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도입**
 - (지원범위) 직원 + 직계 가족까지 대상 확대
 - (건강상담) 전문 의료진에 의한 365일 콜센터를 통한 건강상담
 - (진료지원) 명의(名醫)안내·진료예약 대행, 중증질환시 동행 케어 서비스 제공

3

장기국외훈련 운영개선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부터 훈련 종료에 따른 평가과정까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장기국외훈련 제도의 획기적 변화의 원년을 구축

□ 추진배경 : 운영 전반에 대한 시의회·언론 등 다수 문제 제기

- [시의회] 훈련기간 중 복무, 훈련국가 영어권 편중 등 지적('21. 행정사무감사)
- [언론] 성과보고서 표절 실태 및 형식적 평가 비판('21. 11. KBS 보도 등)
- [감사] 국외훈련 운영 관련 시민감사 청구 접수('22. 1, 사전검토 중)

□ 개선방안

① 선 발 : 선발자 역량검증 강화 및 훈련국가 다변화

- 어학능력 검증을 위한 **원어민 심층 면접 도입**
- 훈련국가 다변화를 위한 **비영어권 훈련국가 지속 발굴**
 - 비영어권 학위과정 신청자 가점부여, 비영어권 지정직무기관 추가 발굴

② 과정관리 : 훈련 중 관리감독 및 불성실자 페널티 강화

- 훈련 중 연구과제보고서(파견 후 1년) **표절검사 및 중간평가 실시**
 - 중간 평가결과는 최종 성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여 훈련성과 극대화 유도
- 중간 보고서 제출기한 도과 시 **훈련비(체재비) 지급 제한**
 - 보고서 제출건수(1년 기준) 학위과정 8건, 일반 직무과정 17건
- 해외 훈련기관 감독관·지도교수 활용, **훈련실태 정기 점검(분기별)**
 - 훈련 불성실자(출석 등 훈련태도 평가)에 대한 페널티 부과(체재비 감액 등)

③ 성과평가 : 표절검사, 평가 시스템 강화 및 대시민 공개 확대

- 표절검사 강화 및 평가위원 다변화 등 **성과보고서 평가시스템 강화**
 - 표절검사 강화(허용률 15% 미만), 성과보고서 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60% 이상 위촉
- 연구과제보고서 등 **대시민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현재 공개 중인 훈련성과보고서 외 연구과제보고서 등도 시민 공개

4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자치구 확산

비표준 웹기술을 제거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전면 개편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자치구 확산을 통해 시-자치구 협업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웹표준 환경 전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오픈('22. 3월)

구분	기 존	개 선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표준 환경 및 특정기술 종속 - ActiveX, 인터넷 익스플로러(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표준화, 표준 문서형식 적용 - Non-ActiveX, IE·크롬·엣지 지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기능 및 검색 등 한계 - 단순 문서 처리기능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기안·열람 기능 개선 - 첨부파일 용량 확대, 타부서 부분공개 문서 열람
공유·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활용 업무자료 공유 불편 ○ 부서/기관 간 협업기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저장공간 S드라이브 제공 ○ 문서 공동작성 프로그램, 협업방 도입

□ 추진계획

- 시스템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용자 지원
 - 헬프데스크 및 유지보수사이트 운영, 실본부국 문의 대응 전담직원 지정
 - 1:1 원격 지원, 전화 응대, 자주하는 질문(FAQ) 및 교육교재 등 자료 게재
- 직원 편의 향상을 위한 추가 기능 개발 등 시스템 고도화
 - 접수문서의 키워드 기반으로 담당자가 자동 지정되어 단순·반복 업무 간소화
 -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시-자치구 간 정보·자원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업무환경 기반 구축
 - IT자원 공동 활용, 문서 통합검색 및 협업방 등 신규 기능 적용
 - 광진·동작·관악·강남 등 11개 자치구 도입, 향후 지속 확대 추진

□ 추진일정

- 문서접수 자동화,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 '22. 3월
- 시스템 공동 사용 자치구 확산 : '22. 4월~12월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체계 구축

①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

②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③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 강화

1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市·區 관리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

□ 추진개요

- 대상자 : 재택치료 대상 코로나19(오미크론 포함) 확진자
- 추진체계 : 市 재택치료지원TF, 區 전담팀 구성 및 관리의료기관 연계
- 주요내용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및 응급 대응체계 구축·운영



- 사업비 : 3,341백만원(간호인력 인건비, 전담반 운영비, 이송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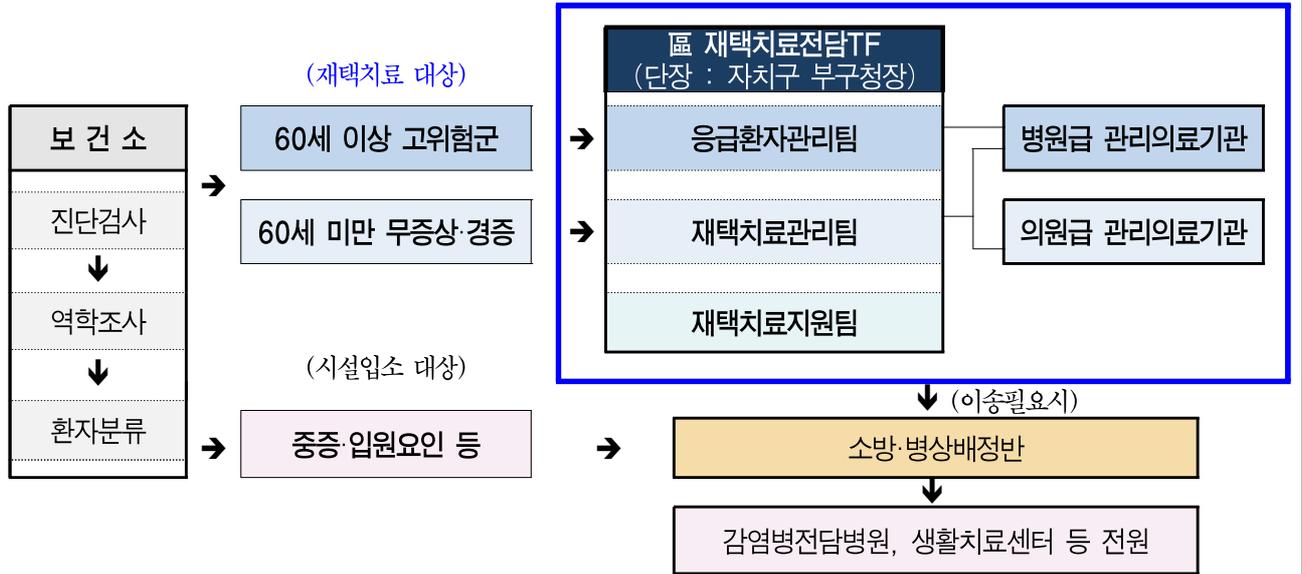
□ 추진계획

- 전국 최초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 시범 운영
 - 區 재택치료운영단 구성(주·야간), 기존 재택치료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진행
- 재택치료 내실화를 위한 자치구 추진체계 밀착 지원 추진
 - 일일 확진자 급증 대비 재택치료 전담 인력 지원 및 관리의료기관 확대
 - 교육용 동영상, 매뉴얼, Q&A 제작·배포 등으로 자치구 업무경감 지원
- 치료제 보급 등 재택치료 환경변화 신속 대응
 - 재택치료 대상자 대면 진료 보장을 위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용 활성화 지원
 - 24시간 응급전화(區 재택전담팀, 관리의료기관) 주기적 점검

□ 향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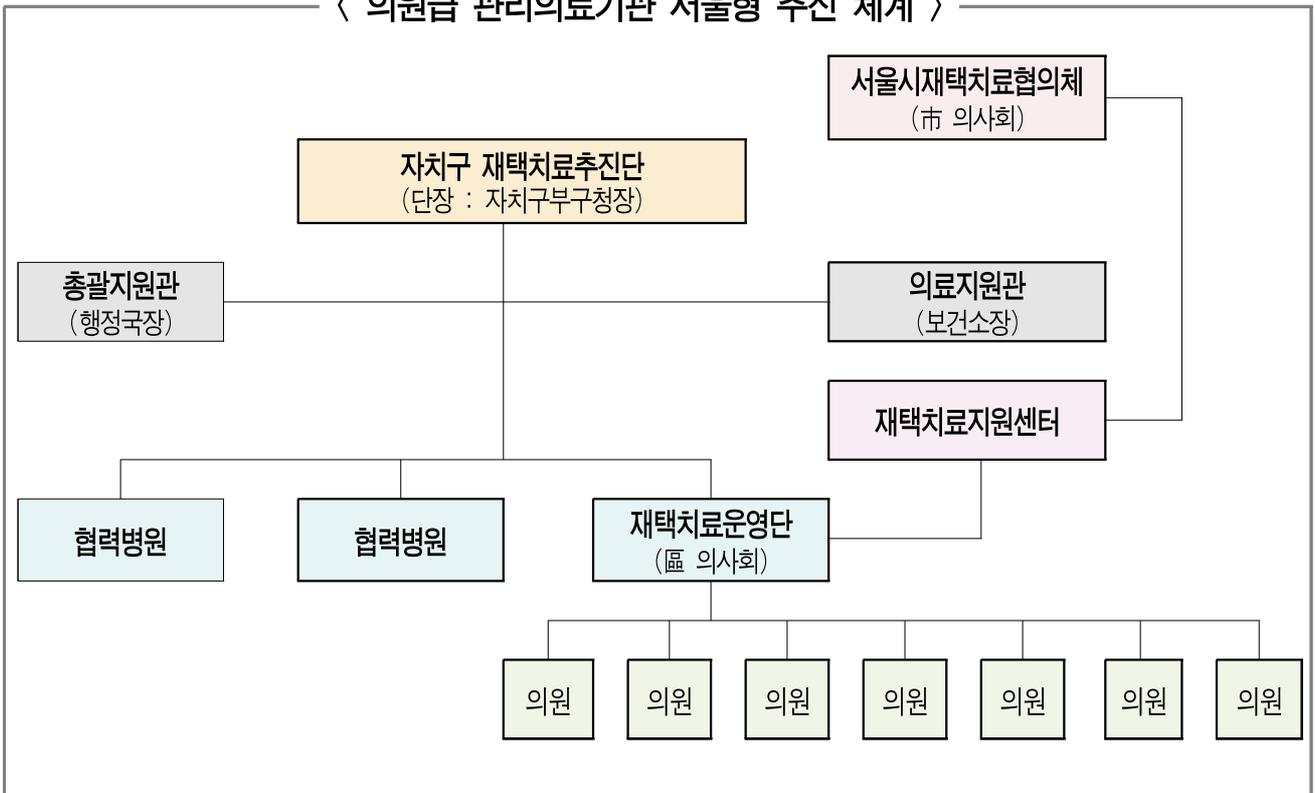
-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 5개 자치구 시범 운영·확대 : '21. 1월 ~ 2월
 -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보완,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참여 확충
- 전담 인력 자치구 수요조사 후 지원(특별조정교부금) : '21. 2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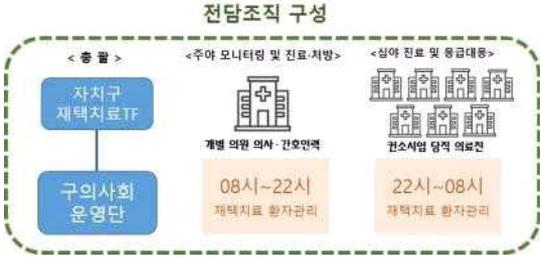
〈 코로나19 환자관리 표준체계 〉



- ▶ (60세 이상 고위험군) 자치구 응급환자관리팀, 병원급 의사가 직접 밀착 모니터링·관리
- ▶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자치구 재택치료관리팀, 의원급 의료기관 연계·재택관리

〈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추진 체계 〉



구 분	(유형 I) 컨소시엄 모델	(유형 II) 센터협력 모델
구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형태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재택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참여의원 + 서울시 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 주·야간 연계하여 24시간 대응
	<p>7~10개 의료기관(의원)</p> 	<p>1개 의료기관(의원)</p> 
관리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미만 (의사1인 간호인력 1인) 참여의원별 10명 이하 배정 권고 ※ 환자 30명 이상일 경우 간호인력 1인 추가, 환자는 최대 50명까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미만 (의사1인 간호인력 1인) 참여의원별 10명 이하 배정 권고 ※ 환자 30명 이상일 경우 간호인력 1인 추가, 환자는 최대 50명까지 관리
근무 시간 (휴일포함)	(주간) 매일 08:00~22:00	(주간) 매일 08:00~22:00
	(야간) 매일 22:00~08:00 ※ 7~10개 의원간 당직운영, 당직운영시간은 구별 변경적용 가능	(야간) 매일 22:00~08:00 ※ 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담당
예비 의사 등	컨소시엄 내 기관끼리 상호등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관(의원) 내 봉직의 또는 타 의료기관 재직 의사 ※ 구의사회 등록회원으로 재택치료를 참여중인 기관도 가능
수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환자관리료(80,860원/일) '21년 기준 	
수가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별 배정된 환자 청구(심평원) ※ 수수료 및 세금은 참여의료기관별 자체정산 	

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방지 도모

□ 운영개요

- 총괄 : 총 35개소 6,176병상(市 16개소, 3,968병상 / 區 19개소 2,208병상)

(기준 / 단위 : '22. 1. 24. / 개, %)

구 분	병상수	운영병상수 (A)	병상현황		병상가동률 (B/A x 100)	입소가능 병상 (A-B-C)
			배정병상(B)	기타(C)		
합 계(35)	6,176	6,022	3,634	527	60.3	1,861
市 센터(16)	3,968	3,927	2,205	389	56.1	1,333
區 센터(19)	2,208	2,095	1,429	138	68.2	528

- 입소대상 : 코로나19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중 재택치료 불가 서울시민
- 운영방법 : 센터구축 및 총괄(행정국), 센터운영(실·본부·국, 2개월 주기)

□ 추진계획

① 입소환자 관리(모니터링) 강화

- [CCTV 모니터링] 운영총괄반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실시, 특히 심야 시간(22시~6시) 환자 모니터링 철저
- [도시락 배부시] 배부시 모니터링 강화 및 미수령시 신속 대응조치 시행
 - 도시락 배부 과정에서 운영총괄반 직원 CCTV 모니터링 반드시 실시
 - 도시락 미수령(20분 경과) 시 1차 유선확인, 유선확인 미응답시 즉시 의료진에게 상황 전달 및 현장 방문 확인

②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대응

- **[병상효율화] 입소환자 격리 해제기간 단축**(10일 → 7일, '22. 1. 26.~)
 - 확진자 급증 대비 신속한 청소·소독을 통해 '오전 퇴소 당일 오후 입소' 실시
 - 입소환자 대상 퇴소일 사전 안내, 예방수칙, 증상발생 시 신고 등 교육 실시
 - 기간 단축에 따른 구호·방역물품 사전 준비 철저
- **[거점센터 강화]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 보안을 위한 거점센터 기능 강화**
 -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시 거점 생활치료센터*(동호생치 등 5개소 994병상) 입소, 증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경중에 따라 전담병원 이송 조치
 - * (입소대상) 고령·기저질환자 등 일반 생활치료센터 입소 곤란자,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③ 시설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

- **[시설 추가확보] 오미크론 급속 확산 및 2개*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22. 2월)에 따른 대체 시설 발굴(시민소통기획관 협조)을 통한 적정 병상 수 유지
 - * 고려대 기숙사(314병상, 2. 9. 종료), 시립대 기숙사(520병상, 2. 12. 종료)
- **[시설물 안전관리] 상설 점검반 구성 및 선제적 보수·점검 실시**
 - (구성·운영) 2개조 총 12명, 센터별 월 2회 이상 순회 점검
 - 내·외부 시설물 관리·유지보수 및 화재예방·안전점검 실시
 - 동절기 제설 대책 및 화재예방 집중관리('21. 11. 15. ~ '22. 3. 15.)



〈생활실 내 전기설비 보수〉



〈검체실 냉·난방기 점검〉



〈환복실 텐트 점검〉



〈자바라텐트 보수〉

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 강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청사 내 방역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차질 없는 업무 수행 도모

□ 추진방향

-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안전조치 시행으로 **직원 건강·안전 최우선 확보**
- 직원 이용 시설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등으로 **집단감염 원천차단**

□ 추진계획

① 확진자 발생시 신속 대응

- 매뉴얼 기반, 확진자 신속 문진으로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적기 시행**
 - 확진자 발생층 전원 선제검사·청사소독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추가 확진자 발생 방지
- 코로나19 완치 직원 대상 의료지원 안내를 통해 **원활한 근무 복귀 유도**
 - 정신적·심리적 불안감 해소, 후유증 관리를 위해 의료지원(인력개발과) 연계 안내

② 청사 방역 및 복무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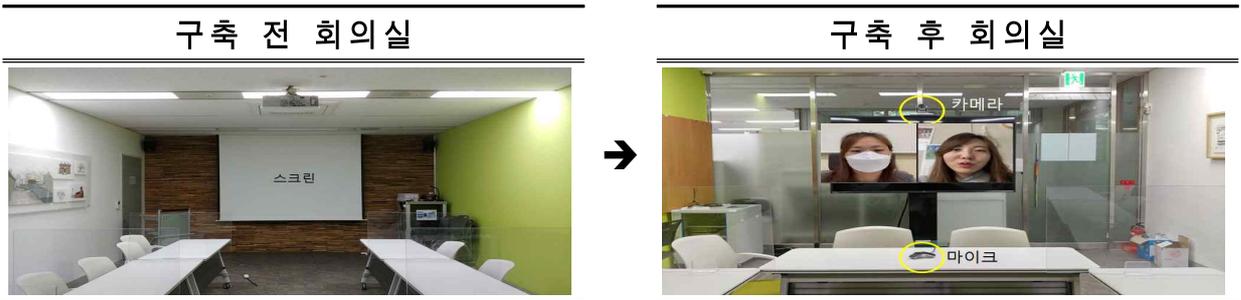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준수유도 및 소독강화**
 - 청사 환경에 맞는 공조기 운영, 기자실 등 공동이용시설 소독 강화
 - 화장실·탕비실 이용인원 제한, 흡연장 거리두기 등 안내·준수유도
- **청사 내 카페(하늘광장 등 4개소) 방역패스 적용 및 거리두기 철저 시행**
 - 사적모임 범위(현재 6인) 내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방역패스 적용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 강화
- **재택·휴가 등 활용하여 부서별 2/3 이하 인원 사무실 근무 조치**
 - 월·화(1부), 수·목(2부), 금(3부) 등 3부제 실시로 재택근무 효과 제고
 - 부서별 재택근무 실태 확인 후 현장 계도

※ 코로나19 관련 부서, 시민안전·민원 대응부서 등 부서별 업무특성 고려 계도 실시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및 준수 여부 확인 강화**
 -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확인 후 현장 계도
- 청사 내 **회의실 운영(대면회의) 최소화 및 사적 모임 자제 권고**
 - 공용회의실(44개) 이용 방역수칙 강화 안내·엄격 시행 및 시스템 개선 추진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 이동 격려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권고

③ 직원 이용시설 지속 개선

- **공용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단계별 확대 구축**
 - 비대면 영상회의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 확대를 통해 비대면 소통행정 강화
 - '23년 내 **쏘** 공용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21년 17개→'22년 32개→'23년 44개)
 - ※ '22년 설치확대 : 총 15개(본관 5, 서소문1청사 5, 서소문2청사 4, 무교청사 1)
 - 영상회의 프로그램인 '서로온'(市), '온나라'(행안부) 시스템 구축·활용
 - ※ 국정원 권고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상용 SW(줌, 웹엑스)'는 사용 지양



-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화장실·E/V 등 지속적 환경 개선**
 - 밀집·밀접·밀폐조건인 화장실·엘리베이터 내 공기살균기 설치로 비말감염 예방
 - 청사 내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항균 코팅을 하여 바이러스 전이 방지

공기살균기 설치			항균 코팅	
				
화장실용(222대, '21.12.23. 완료)			청사내 손잡이 등(3,065개, '22.1.23. 완료)	
EV용(28대, '22.2월)				

3. 지방분권 강화 및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①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

②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③ 서울시-서울시의회 간 인사운영 협약체결

④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효율적 추진

⑤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확대

⑥ 디지털 기반 공공아카이브 운영 강화

1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자원조정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자치구의 표준적 행정수준 확보 및 특별수요에 대한 자원 보전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재 원** : 보통세의 22.6%
- **종 류** : 일반조정교부금(총액의 90%), 특별조정교부금(총액의 10%)

□ '22년 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본예산(B)	본예산 기준 증감(B-A)	%
	본예산(A)	추경예산(a)	최종예산(A+a)			
계	32,785	7,685	40,470	38,123	25,100	16.3
일반조정교부금	29,506	6,917	36,423	34,311	22,589	16.3
특별조정교부금	3,279	768	4,047	3,812	2,511	16.3

□ 추진계획

- **[일반조정교부금]**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
 -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및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65% 교부
-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교부
 - 코로나19 방역 등 시민안전 분야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기 지원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정교부금	11,055	13,153	9,188	4,727
주요 일정	교부계획 수립	신속집행 조기교부	추경 및 가산교부	2023년 교부금 산정

〈 조정교부금 개선방안 〉

- ▷ 서울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시 당해연도 사전 의회보고 후 다음연도 상정 및 적용
- ▷ 용역(매 3년 경과) 수행시 명확하고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여 區별 자원조정교부금의 투명한 운영 도모

2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추진으로 안전·안심·공정선거 및 공직선거법 등 법령 준수, 투표 홍보 등 차질 없는 선거사무 운영 도모

□ 선거개요

선거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시	'22. 3. 9.(수) 06:00 ~ 18:00	'22. 6. 1.(수) 06:00 ~ 18:00	
선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 국회의원 보궐(서초갑, 종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기초의회의원(지역구, 비례) ○ 교육감 	
소요예산	12억(국비)	477억(사비)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21. 7. 12. 부터	(시장, 교육감) '22. 2. 1. 부터 (구청장, 시·구의원) '22. 2. 18. 부터
	사직기한	'21. 12. 9. 까지	'22. 3. 3. 까지
	후보자등록	'22. 2. 13. ~ 2. 14.	'22. 5. 12. ~ 5. 13.
	재외선거	'22. 2. 23. ~ 2. 28.	해당사항 없음
	거소투표	'22. 2. 9. ~ 2. 13.	'22. 5. 10. ~ 5. 14.
	선거기간	'22. 2. 15. ~ 3. 9.	'22. 5. 19. ~ 6. 1.
	사전투표	'22. 3. 4. ~ 3. 5.	'22. 5. 27. ~ 5. 28.

□ 안전관리 추진계획

○ 투표참여시민 안전관리 대책 실시

- 발열체크,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이격거리(1m) 유지 등
- 이상증상자, 마스크 미착용자 → 임시기표소 투표 안내

○ 투·개표 사무원 안전관리 대책 실시

- 투·개표 전후 소독, 주기적 환기(2시간마다 1회 이상, 10분) 등 환경방역 실시
- 투·개표 사무원 코로나19 예방교육 실시 및 마스크·위생장갑 등 방역용품 착용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행안부·선관위 旣 건의)

- 병원입원 등 확진자·재택치료자 거소투표 가능 안내 조치 등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운영 확대('21년 보궐 : 5개소 운영)



□ 공명선거 추진계획

○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각종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누락자 확인, 확정 작업 철저
-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관리, 투표사무원 위촉 등 차질 없는 수행

○ 공명선거 추진체계 확립

- 지역내 유관기관(관할 선관위, 경찰관서)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행안부·시·구 선거사무추진반 상호체제하 사건·사고 실시간 대응 및 공유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사항 등 주기적 안내
- 각종 직무수행 시 선거법 저촉사항 등 사전검토
- 공무원의 SNS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

○ 투표 안내 및 독려를 위한 대시민 홍보

- 옥외 전광판 등 市 보유매체 활용 홍보
-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서울광장 홍보탑 설치



□ 향후일정

【 대통령선거 】

- 거소투표 신고(5일간) : '22. 2. 9. ~ 2. 13.
- 사전투표(2일간) : '22. 3. 4. ~ 3. 5.(06:00~18:00)
- 본투표 : '22. 3. 9.(06:00~18:00)

【 전국동시지방선거 】

- 거소투표 신고(5일간) : '22. 5. 10. ~ 5. 14.
- 사전투표(2일간) : '22. 5. 27. ~ 5. 28.(06:00~18:00)
- 본투표 : '22. 6. 1.(06:00~18:00)

3

서울시-서울시의회 간 인사운영 협약체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 1. 13.)에 따라 균형있는 인력배치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인사운영 협약체결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근거 마련('21. 1. 13.)
- 市 공무원의 신분·후생복지 불이익 없이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기반 마련 필요

□ 협약체결 개요

- 체 결 일 : 2022. 1. 12.(수)
- 체 결 자 : 서울시장 - 서울시의회 의장
- 체결방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협약서 서명 후 교환
※ 협약서 2부에 양 기관장 서명 후 각 기관 1부씩 보관

〈 협약내용 〉

- ▶ 인사교류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 통합인사 : 기술직·전산직 통합인사 실시(별도 통합인사합의서 체결)
- ▶ 교육훈련 : 훈련기관, 프로그램 등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운영
(단, 국내외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은 매년 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 후생복지 :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 사항은 서울시가 통합운영
- ▶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 서울시에서 현재 시스템통합 운영관리 등
- ▶ 인사운영협의회 : 협약서의 효율적 운영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인사운영협의회 설치 등

□ 향후계획

-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 수시협의하여 균형 있는 인력배치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 지원

4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효율적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재정비를 통한 주민자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문제 신속대응 및 해결력 강화를 위한 찾동 핵심기능에 집중

□ 주민자치 개선방안 모색

○ '22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 주민자치사업단(20개 구) 및 주민자치회(100개 동) 대상 3,992백만원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총회 개최시기를 감안, 차질 없는 사업비 지원('22. 1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2. 2월~7월)

- 성과분석 및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

□ 지역문제 신속대응을 위한 찾동 핵심기능 및 역량 강화

○ 위기취약 주민 보호 강화로 찾동 핵심기능 집중

- 코로나19 상황 대면활동 제약으로 스마트 돌봄체계 확대
 - ▷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 앱 지원, ICT(건강기기) 등 활용
- 돌봄 SOS센터 전 동 확대로 긴급돌봄 제공 강화('22. 1월~)
 - ▷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청소·세탁 등), 식사지원 등 10대 서비스

○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찾동 추진주체 역량 강화

- 추진주체 역량강화 교육 지원(동장, 담당자 등) : 11개('21년) → 13개 과정('22년)
- '공공사례관리 스쿨' 과정의 세분화 및 현업 적용도 향상으로 문제해결력 강화
 - ▷ 기초·심화과정 운영, 전문과정 신설, 사례중심과 실습위주 참여형 교육 확대 실시

5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확대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

□ 사업개요

-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원문 공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행정정보 사전공개, 사회적 약자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선제적 정보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직원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전문성·역량 강화

□ 추진계획

- 한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 PDF 형식으로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방식 HWP(한글뷰어 등 별도 프로그램 필요) → PDF로 변경
 - 실시간 원활한 PDF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시민용 웹서버 성능 보강
- 사전 공개대상 행정정보 정비 및 시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및 대규모 예산사업 등 사전 공개대상 발굴·정비
 - 시청각장애이용 점자단말기 비치 및 정보소통광장 웹접근성 인증 지속 관리
-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성 제고 및 정보공개 직원교육 의무화 추진
 - 심의회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행정·법률 등 외부전문가로 신규위원 위촉
 - 전직원 대상 시청각 교육교재 활용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교육 실시(연 1회)

□ 추진일정

- 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PDF 변환기능 개발 및 적용 : '22. 2월 ~ 6월
- 사전공개 대상정보 정비 : '22. 7월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교육 : 연중

6

디지털 기반 공공아카이브 운영 강화

시민에게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 및 온·오프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록문화 확산과 기록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계획

① 디지털 기록자원 집중수집 및 관리 본격화

○ 비전자기록 수집에서 중요 디지털·멀티미디어 기록중심 수집체계로 전환

유 형		대 상	'22년 계획
디 지 털 기록	전 자 문 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전자문서 약 200만건	이관 및 검수 설계
	행 정 정 보 데이터세트	市 및 관할기관 중요 행정정보데이터 729개	시범이관 및 뷰어개발 (1~2개 시스템)
멀티미디어 기록	사 진 · 영 상	언론담당관 등 멀티미디어 기록 집중 생산·보유부서 기록	사진 180만컷, 영상 1.5만건 전량 이관 정리

○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SDA) 기반의 관할기관 기록관리 업무체계 일원화



- (중요기록 인수·보존) 관할기관 중요기록물 전자적 인수·통합보존 구현
- (기록생산현황관리) 기관별 기록생산현황 통계·모니터링 기능 신설
- (기록분류기준관리) 접수 → 심사 → 조정·승인 → 통보 → 적용 전 과정 시스템화

2 기록정보 콘텐츠 온·오프라인 서비스 확대

○ 멀티미디어 기록 콘텐츠 및 기록 열람 서비스 강화

- (문 서) 기록물 원문제공 확대('21년 8만건 → '22년 15만건 목표)
- (사 진) 서울사진아카이브의 시정사진 및 수집사진 컬렉션 서비스 제공
- (영 상) '서울뉴스' 등 시정 홍보·공보영상 디지털화 및 유튜브 공개
- (기록열람) 연구·업무참고 목적의 기록정보 8만건 제공(연 100% 이상 증가)



3 기록문화 프로그램 집중 운영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일반시민, 학생·교사, 전문가·활동가 등 참여

- (일반시민) '서울의 사진 기록가',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기록과 직업' 등
- (학생·교사) 온라인 워크북과 학습지도안 등을 활용한 초등, 중등 프로그램
- (전문가·활동가) 대학원생 및 연구기관, 시민기록활동가, 대학실습프로그램 연계

○ ['22년 서울기록페어] 대표 기록문화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집중 운영

- (기 간) '22년 11월 2째 주 (월~토 6일간)
- (장 소) 【오프라인】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 등 【온라인】 www.scaaf.kr
- (프로그램) 특별전시, 강연, 다큐상영, 기록체험, 교육·세미나 등 20여개
- ※ (특별전) 기억과 시간의 복원, 아카이브 시네마, 기록 카탈로그 세미나 등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4,569,980	1,015,000	1,718,000	956,000	880,980
주요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 ◦ 관할기관 지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지도·점검 ◦ 市 기록물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특별전시 오픈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기록페어 개최 ◦ 기록관리위원회 개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 디지털 기록자원 제공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div>					

Ⅲ. 2022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 세입예산

(기준 / 단위 : '22. 1. 1. / 천원, %)

구 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계	1,274,197,879	20,402,003	△1,253,795,876	△98.40%
세외수입	12,182,121	17,283,783	5,101,662	41.88%
경상적 세외수입	1,088,431	1,258,149	169,718	15.59%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료)	543,357	648,166	104,809	19.29%
시청사 임대수입	466,095	520,937	54,842	11.77%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166	174	8	4.82%
시직원상조회사무실 사용료	6,800	8,273	1,473	21.66%
공무원수련원판매시설 위탁수수료	7,661	10,392	2,731	35.65%
서울기록원공유재산 임대료	62,635	108,390	45,755	73.05%
사용료수입	494,950	498,674	3,724	0.75%
서울광장사용료수입	76,071	76,071	0	0.0%
다목적홀사용료수입	55,218	55,218	0	0.0%
본청사직원식당사용료수입	2,345	2,345	0	0.0%
후생동강당사용료수입	19,600	19,600	0	0.0%
시청사부설주차장수입	329,884	329,884	0	0.0%
지역정압기설치부지 사용료수입	11,832	13,156	1,324	11.19%
서울기록원컨퍼런스룸 사용료수입	0	2,400	2,400	-
수수료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560	4,482	△78	△1.71%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560	4,482	△78	△1.71%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	20,727	13,631	△7,096	△34.24%
시청사아간전기판매수입	20,727	13,631	△7,096	△34.24%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4,837	93,196	68,359	275.23%
기타이자수입(자치행정과)	24,837	93,196	68,359	275.23%

구 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임시적세외수입	11,077,123	16,011,480	4,934,357	44.55%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22,593	18,423	△4,170	△18.46%
공용차량매각대금	22,593	18,423	△4,170	△18.46%
자치단체간부담금(자치 단체간부담금)	1,510,034	4,071,587	2,561,553	169.64%
통합기록관리시스템운영 자치구부담금	978,825	1,602,506	623,681	63.72%
업무관리시스템통합유지보수관련 자치구부담금	250,530	538,157	287,627	114.81%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확산 자치구부담금	280,679	1,930,924	1,650,245	587.95%
보조금반환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	1,734,020	801,135	△932,885	△53.80%
자치회관운영보조금집행잔액반환 금	1,707,020	716,832	△990,188	△58.01%
찾아가는동주민센터보조금집행잔 액반환금	27,000	35,725	8,725	32.31%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0	48,578	48,578	-
기타수입	7,723,155	11,050,479	3,327,324	43.08%
그외수입	7,723,155	11,050,479	3,327,324	43.08%
그외수입(총무과)	2,830,000	30,598	△2,799,402	△98.92%
징계부가금등	8,098	8,747	649	8.01%
시청의무실,치과,한의원진료수입	177,935	138,037	△39,898	△22.42%
자치구직원수련원시설 이용료	328,113	250,875	△77,238	△23.54%
국외훈련자훈련비정산금수입	3,745	2,756	△989	△26.41%
대여학자금부담금반환금	4,310,000	9,900,000	5,590,000	129.70%
그외수입(자치행정과)	45,839	700,041	654,202	1,427.17%
보안자료파쇄매각대금	19,425	19,425	0	0.0%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	87,321	69,856	△17,465	△20.0%
지난연도수입	87,321	69,856	△17,465	△2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567	14,154	△2,413	△14.57%

구 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변상금	16,567	14,154	△2,413	△14.57%
서울광장무단사용변상금	16,567	14,154	△2,413	△14.57%
지방교부세	395,271	0	△395,271	△100.0%
지방교부세	395,271	0	△395,271	△100.0%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395,271	0	△395,271	△1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예방	65,271	0	△65,271	△100.0%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330,000	0	△330,000	△100.0%
보조금	1,261,619,284	3,089,597	△1,258,529,687	△99.76%
국고보조금등	1,261,619,284	3,089,597	△1,258,529,687	△99.76%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1,261,619,284	3,089,597	△1,258,529,687	△99.76%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	16,000	10,410	△5,590	△34.94%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운영지원	114,500	0	△114,500	△100.0%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 서비스지원	219,724	223,690	3,966	1.80%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32,500	30,000	△2,500	△7.69%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1,329,000	0	△1,329,000	△100.0%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	783,000	820,997	37,997	4.8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 접종센터 운영 지원)	11,750,333	0	△11,750,333	△10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47,374,227	0	△1,247,374,227	△100.0%
자치구 재택치료 활성화운영지원	0	885,000	885,000	100.0%
자치구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0	1,119,500	1,119,5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3	28,623	27,420	2,279.30%
보전수입등	1,203	28,623	27,420	2,279.30%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03	28,623	27,420	2,279.3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03	28,623	27,420	2,279.30%

□ 세출예산

(기준 / 단위 : '22. 1. 1. / 천원,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행정국	5,969,099,103	4,147,360,593	△1,821,738,510	△30.52%
총무과	41,293,218	39,015,925	△2,277,293	△5.51%
행정지원체제 강화	38,454,590	36,159,816	△2,294,774	△5.97%
물품관리	1,250,648	839,623	△411,025	△32.86%
행정장비 구매	1,250,648	839,623	△411,025	△32.86%
청사관리	35,961,975	34,415,168	△1,546,807	△4.3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0,672,869	28,920,059	△1,752,810	△5.71%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92,400	392,400	0	0.0%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437,000	437,000	0	0.0%
시청사 청소관리	3,088,040	3,426,173	338,133	10.95%
노후 시설물 개선	1,100,380	912,828	△187,552	△17.04%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101,909	156,032	54,123	53.11%
시청사 안내원운영	169,377	170,676	1,299	0.77%
행정관리 지원	1,241,967	905,025	△336,942	△27.13%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 모니터링	68,493	68,472	△21	△0.03%
업무택시 운영	250,000	250,000	0	0.0%
시책사업 추진	60,000	64,000	4,000	6.67%
주요 시정행사 지원	273,291	297,641	24,350	8.9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300,000	0	△300,000	△100.0%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팅 운영	224,912	224,912	0	0.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65,271	0	△65,271	△100.0%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2,838,628	2,856,109	17,481	0.62%
기본경비	2,838,628	2,856,109	17,481	0.62%
기본경비	2,838,628	2,856,109	17,481	0.62%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인사과	143,194,364	159,583,912	16,389,548	11.45%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8,482,320	8,334,565	△147,755	△1.74%
포상관리	1,516,607	1,522,107	5,500	0.36%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010,577	1,010,577	0	0.0%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506,030	511,530	5,500	1.09%
인사관리 운영	6,965,713	6,812,458	△153,255	△2.20%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743,533	419,507	△324,026	△43.58%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58,320	58,320	0	0.0%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338,218	381,746	43,528	12.87%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465,042	174,730	△290,312	△62.43%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373,305	205,495	△167,810	△44.95%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350,257	4,372,844	22,587	0.52%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637,038	805,937	168,899	26.51%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	0	393,879	393,879	-
행정운영경비 (인사과)	134,712,044	151,249,347	16,537,303	12.28%
기본경비	123,242	123,242	0	0.0%
기본경비	123,242	123,242	0	0.0%
인력운영비	134,588,802	151,126,105	16,537,303	12.29%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34,588,802	151,126,105	16,537,303	12.29%
인력개발과	63,256,570	60,860,475	△2,396,095	△3.79%
인적자원 역량 강화	52,369,638	51,566,506	△803,132	△1.53%
교육훈련	8,902,435	9,536,784	634,349	7.13%
장기국외훈련	3,649,208	3,649,208	0	0.0%
단기국외훈련	80,929	80,929	0	0.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2,200	12,200	0	0.0%
국내위탁 교육훈련	3,134,500	3,745,390	610,890	19.49%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직장교육 활성화	732,246	780,200	47,954	6.55%
학습조직 운영 지원	35,500	35,500	0	0.0%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33,095	135,000	1,905	1.43%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742,237	1,098,357	356,120	47.98%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382,520	0	△382,520	△100.0%
공무원 복지증진	31,114,688	35,192,542	4,077,854	13.1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1,037,072	22,090,846	1,053,774	5.01%
직원 후생복지 지원	1,982,720	5,544,504	3,561,784	179.64%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393,707	1,605,207	211,500	15.18%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759,656	900,543	140,887	18.55%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580,000	1,658,009	78,009	4.94%
직원 쉼터 프로그램 운영	253,260	253,260	0	0.0%
부조급여 지급	2,235,400	1,334,900	△900,500	△40.28%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64,400	50,000	△14,400	△22.36%
대여학자금 부담금	18,933	18,933	0	0.0%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87,540	87,540	0	0.0%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1,702,000	1,648,800	△53,200	△3.13%
수련원 관리사업	12,352,515	6,837,180	△5,515,335	△44.65%
연수원 운영	6,599,572	6,837,180	237,608	3.60%
속초수련원 증축	5,752,943	0	△5,752,943	△100.0%
행정운영경비 (인력개발과)	186,932	93,969	△92,963	△49.73%
기본경비	186,932	93,969	△92,963	△49.73%
기본경비	186,932	93,969	△92,963	△49.73%
재무활동 (인력개발과)	10,700,000	9,200,000	△1,500,000	△14.02%
내부거래지출	10,700,000	9,200,000	△1,500,000	△14.02%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10,700,000	9,200,000	△1,500,000	△14.02%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자치행정과	5,708,898,588	3,873,566,471	△1,835,332,117	△32.15%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추진	14,908,041	5,807,226	△9,100,815	△61.05%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4,908,041	5,807,226	△9,100,815	△61.05%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4,336,648	5,246,751	△9,089,897	△63.40%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205,100	165,040	△40,060	△19.5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291,293	395,435	104,142	35.75%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75,000	0	△75,000	△100.00%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교과 감동행정 구현	44,448,519	51,948,636	7,500,117	16.87%
시민참여 강화	44,448,519	51,948,636	7,500,117	16.87%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419,505	357,200	△62,305	△14.8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39,960	0	△539,960	△100.0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14,500	0	△114,500	△100.0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29,000	0	△1,329,000	△100.00%
자원봉사센터민관협력 강화	4,608,341	4,629,346	21,005	0.46%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219,724	223,690	3,966	1.8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27,300	867,469	40,169	4.86%
시민 시상제도 운영	59,992	59,992	0	0.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32,000	20,820	△11,180	△34.9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1,082,897	406,500	△676,397	△62.46%
지방선거 관리	34,000,000	43,952,740	9,952,740	29.27%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454,000	877,279	423,279	93.23%
제주 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55,000	0	△55,000	△100.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32,500	30,000	△2,500	△7.69%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526,400	523,600	△2,800	△0.53%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147,400	0	△147,400	△100.0%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일반예산 (타기관지원등)	4,046,954,495	3,812,308,120	△234,646,375	△5.80%
자치구교부금	4,046,954,495	3,812,308,120	△234,646,375	△5.80%
조정교부금	4,046,954,495	3,812,308,120	△234,646,375	△5.80%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145,155	146,211	1,056	0.73%
기본경비	145,155	146,211	1,056	0.73%
기본경비	145,155	146,211	1,056	0.73%
재무활동 (자치행정과)	25,606	15,428	△10,178	△39.75%
보전지출	25,606	15,428	△10,178	△39.75%
국고보조금 반환	25,606	15,428	△10,178	△39.75%
긴급재난지원	1,602,416,772	3,340,850	△1,599,075,922	△99.79%
긴급재난지원	1,602,416,772	3,340,850	△1,599,075,922	△99.79%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실시(지역예방 접종센터 운영 지원)	11,750,333	0	△11,750,333	△10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590,336,439	0	△1,590,336,439	△100.0%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330,000	0	△330,000	△100.0%
자치구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0	1,475,000	1,475,000	-
자치구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0	1,865,850	1,865,850	-
정보공개정책과	6,906,501	8,717,915	1,811,414	26.23%
정보관리강화	6,558,580	8,358,510	1,799,930	27.44%
정보소통혁신	1,054,596	903,903	△150,693	△14.29%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996,721	846,078	△150,643	△15.11%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57,875	57,825	△50	△0.09%
기록물 시설관리	5,503,984	7,454,607	1,950,623	35.44%
기록정보관리	2,102,032	2,662,984	560,952	26.69%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1,255,934	1,349,620	93,686	7.46%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 고도화	2,146,018	2,852,003	705,985	32.90%
디지털 기록문화관 조성	0	590,000	590,000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1년 예산현액	'22년 본예산	'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행정운영경비 (정보공개정책과)	347,921	359,405	11,484	3.30%
기본경비	347,921	359,405	11,484	3.30%
기본경비	347,921	359,405	11,484	3.30%
공무원수련원	888,997	956,983	67,986	7.65%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819,008	886,954	67,946	8.30%
수련원 관리사업	819,008	886,954	67,946	8.30%
수련원 유지 및 관리	186,218	212,018	25,800	13.85%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64,500	351,060	△13,440	△3.69%
수련원축탁계약직 (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268,290	323,876	55,586	20.72%
행정운영경비 (공무원수련원)	69,989	70,029	40	0.06%
기본경비	69,989	70,029	40	0.06%
기본경비	69,989	70,029	40	0.06%
서울기록원	4,660,865	4,658,912	△1,953	△0.04%
기록관리강화	4,569,299	4,569,980	681	0.01%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4,569,299	4,569,980	681	0.01%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2,237,804	2,393,210	155,406	6.94%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705,604	617,570	△88,034	△12.48%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1,075,990	1,022,800	△53,190	△4.94%
서울기록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49,901	536,400	△13,501	△2.46%
행정운영경비 (서울기록원)	91,566	88,932	△2,634	△2.88%
기본경비	91,566	88,932	△2,634	△2.88%
기본경비	91,566	88,932	△2,634	△2.88%

IV.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69	41	16	8	4
	시정· 처리요구사항	44	18	15	7	4
	건의 사항	6	4	1	1	-
	기타(자료제출 등)	19	19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 1-1. 행정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4년 동안 23회에 걸쳐 2천 5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청구, 집행함. 회계운영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사했으나 회계상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 감사였다고 할 것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예산집행 비목 부적정)를 반영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 '21.11.~ - (당초) 교직원 연수연구비 ⇒ (변경) 수용비 및 수수료 ○ '21년도 시청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 '21.11.22.~11.23.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 시청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서울시) : 연2회(반기별) ○ 어린이집 정기 운영·회계 점검(한솔어린이재단) : 연1회(하반기)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 1-2. 무늬는 시청어린이집인데 일반 지역의 사설 어린이집 보다 못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재단'의 이름만 보고 시청어린이집 위탁 계약이 체결된 듯 보임. 재단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하청에 하청, 위탁에 재위탁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시청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시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에는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한 제3자 위탁 허용 여부 검토 ⇒ (유권해석 결과) 서울시 별도 판단으로 결정('21. 10.) ○ 향후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 등 방침 수립 시 어린이집 원장 직접고용 의무화 예정('22. 4.~) ※ 위탁기간 만료 전 現 수탁업체에서도 자체 직고용 검토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2. 4. ○ 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2. 6. ○ 수탁사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2. 9.~1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 1-3. 행정국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민간위탁을 맺고 서울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은 원장과의 위임계약을 맺고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법적 고발 대상인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함.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어린이집 전문 수탁업체와 원장과의 위임계약 형식의 계약은 업계의 통상적인 운영 방식임 ○ 재단과 원장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재위탁 금지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수사 미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에 따르면 위탁, 고용 등의 계약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구분함 ○ 다만 '23년 재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원장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도록 위탁 협약서 변경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2. 4. ○ 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2. 6. ○ 수탁사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2. 9.~11.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 1-4. 2017년 10월부터 현재 까지 한솔재단이 시청어린이집 수탁을 하며 3명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를 재위탁함.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15조 위반사항인 제3자 위탁 금지에 해당함. 그럼에도 행정국은 적극조치하지 않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한 제3자 위탁 허용 여부 검토 ⇒ (유권해석 결과) 서울시 별도 판단으로 결정('21. 10.) ○ 향후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 등 방침 수립 시 어린이집 원장 직접고용 의무화 예정('22. 4.~) ※ 위탁기간 만료 전 現 수탁업체에서도 자체 직고용 검토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2. 4. ○ 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2. 6. ○ 수탁사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2. 9.~1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p> <p>1-5. 행정국장, 한솔재단 대표는 시청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계자이지 외부인이 아님. 코로나를 핑계로 감사를 받은 시청 어린이집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등을 통한 관리·감독 의무 이행 : 상시 - 단, 영유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추진 ○ '22년도 시청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서울시) : 연2회(반기별) ○ 어린이집 정기 운영·회계 점검(한솔어린이재단) : 연1회(하반기)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p> <p>1-6. 시청어린이집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임. 경찰청 등의 타 직장어린이 집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내년 시청어린이집 예산에 처우개선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비 수당 신설 및 지급 : '21.11. - 1인당 15만원 지급 (15만원 ×45명 = 675만원) ○ 연간 수당 1인당 총 60만원(당초 35만원에서 25만원 증액)
<p>1. 시청 어린이집 관련</p> <p>1-7. 행정국장은 시청직장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 있는 내부인이니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변경) 승인 검토 : 상시 ○ '22년도 시청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서울시) : 연2회(반기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생활치료센터 관련 2-1.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1일 폐기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센터별로 일괄적으로 5~7% 도시락 추가 주문하여 도시락을 과도하게 폐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음. 생활치료센터 센터별 도시락 1일 폐기량을 제대로 집계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센터별 조·중·석식 도시락 폐기량 집계 : '21.11.15.~ ○ 단, 12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3~4% 내외로 추가 주문 및 폐기량 발생 최소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치료 활성화 및 생치 입소 인원 감소에 따라 현재 입소한 환자 수에 따라 주문 시행 : '22. 2. 16.~
<p>2. 생활치료센터 관련 2-2. 생활치료센터 도시락 만족도가 1차에 비하여 2차에 많이 하락됨. 2차 만족도 조사에서 폭염이 만족도 조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으나 3차 만족도 조사는 시기상 폭염의 조건을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또한 아동, 특정 재료 알레르기 보유자 등을 고려하여 메뉴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락 만족도 조사(3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21. 11. 22.(월) ~ 12. 6.(월), 총 15일간 - 참여인원 : 총 1,201명(입소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 만 족 도 : '만족' 이상 68.3%(1차(58.4%), 2차(46.6%)) - 개선사항 : 잡채 등 나물류 및 브로콜리 등 채소류 제공 확대, 1일 2회 이상의 다양한 샐러드 제공 등 ○ 조미료 등 간 조절 메뉴 별도 제공, 일부메뉴 양 조절 등 입소자 요구에 대해 개인별 맞춤 대응하여 만족도 제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차 도시락 만족도 조사 실시 : '22. 2월 ○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모니터링 : '22. 3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생활치료센터 관련 2-3. 생활치료센터 근무기록지에 허위 사인이 난무하고, 근로자들의 수령금액을 맞추기 위해 법정공제가 아닌 기타 지원공제 항목을 만들어 급여가 엉터리로 지급되고 있으며, 도시락이 입소인원 대비 많은 개수가 주문되어 손도 못 대고 버려지는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용역 계약시 기타지원공제 항목 제외 조치 : '22.1.1.~ ○ 매일 센터별 조·중·석식 도시락 폐기량 집계 : '21.11.15.~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운영실국 교육 및 현장 점검 통해 근무일지, 용역 복무사항 등 수시 관리 : 상시 ○ 재택치료 활성화 및 생치 입소 인원 감소에 따라 현재 입소한 환자 수에 따라 주문 시행 : '22. 2. 16.~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1. 주민자치회 사업은 협치적 성격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다른 부서인 지역공동체과와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평가라는 미명하에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운영기반 구축지원, 지역공동체과는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발굴 및 실행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 부서간 자료공유 등 동주민자치회의 의제활동,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총회 개최지원 등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협의 및 자료 공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2.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별도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교부 집행 중지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음. 일의 선후를 따져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정을 진행할 것.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계획 수립 완료('22.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22.1월) ○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방향 마련('22.2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기본과제로 추진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3. 주민자치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준비나 실행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고, 시장의 생각이 기존 사업 진행방향과 다를 수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범위 안에서 취사선택 되어야 할 것임.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서울시-자치구 실무 TF 회의 개최(市 예산담당관 - 區 기획예산과, '21.9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예산 지원기간 및 시비 지원기준 안내 ○ '22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예산 편성('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재원부담을 위한 행정 준비기간 및 사업단 고용 안정성 등 고려 '22년 상반기까지 예산지원 ○ '22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계획 수립('22.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22.2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 문제점 검토, 사업효과 분석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4. 주민자치회 간사, 지원관, 공무원, 구청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음. 간사와 지원관 충돌이 있고, 급여차이도 있어 갈등이 있으니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확정('21.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22.2월~7월) -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 문제점 검토 및 사업효과 분석 등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5. 서울형주민자치회의 시행,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난 이후, 과연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사업평가와 분석이 필요함.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확정('21.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22.2월~7월) -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 문제점 검토 및 사업효과 분석 등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6.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서울시가 보다 개선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확정('21.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22.2월~7월) -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 문제점 검토 및 사업효과 분석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7. 주민자치 '교육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 출신 분들이 각 자치구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하며, 강사비도 품앗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주민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의 같은 강사가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모든 자치구에 적용하고 진행하는 것은 자치가 아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단장들이 근무 시간에 다른 자치구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강사비를 받아간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확정('21.12월) ○ 마을공동체사업(주민자치회 사업 포함)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중(감사담당관, '21.12.22.~'22.1.27. 중 25일)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22.2월~7월) -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 문제점 검토 및 사업효과 분석 등
<p>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3-8. 시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내 삶에 가까운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주민자치사업단 소속 인력과 특정 단체 인력 배분리기로 전략하고 눈먼 돈이 된 데는 서울시가 그동안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임.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확정('21.12월) ○ 마을공동체사업(주민자치회 사업 포함)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중(감사담당관, '21.12.22.~'22.1.27. 중 25일)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주민자치 발전방안 마련('22.2월~7월) - 지원체계, 운영방식 등 문제점 검토 및 사업효과 분석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p> <p>4-1.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시민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89명을 채용했음에도 전임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생각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현재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개선계획을 시정하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미반영</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임기제공무원을 선발·임용함.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전임시장 지우기의 일환이 아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이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무분석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p>4.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p> <p>4-2. 지난 10년간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가 48.6% 증가한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45.1% 증가함. 마치 일반직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임기제 공무원만 증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됨. 또한 전체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10%에서 16%로 증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증가가 문제는 아님, 다만, 임기제공무원 증가에 따른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개선계획을 수립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은 대우하고, 아울러 임기제공무원 채용의 기회 및 공정성을 높여 전문성과 역량이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p> <p>4-3. 임기제 공무원 관련 작년 행정감사 때는 부정적인 의견 없었고 더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함.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온정주의”와 “평가의 관대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동등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온정을 베푸는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으로 자칫 일반 공무원은 내부인이고 임기제 공무원은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주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기 바람. 업무 보고서 15페이지 연장 기준을 강화하여 s등급 5회 이상 나오는 직원에 한하는데 지금까지 s등급 5회 이상인 거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 해당제도에 속한 사람들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양한 인력이 늘어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써 정립할 것인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미반영</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은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시행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임기제공무원 채용 기회 및 공정성을 높여 역량이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이 서울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 4-4. 2008년도에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면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지금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는 법과 제도를 역행하고 있는 것임. 시장이 바뀌니 인사계획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서울시가 인사운영을 허술하게 하는 것임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미반영</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우리시는 근무기간 연장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무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관련 법령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임기제공무원 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음
<p>4.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련 4-5.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은 공직 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 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미반영</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임기제공무원을 선발·임용함.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검증 및 기간 연장 등 운영관리가 방만하여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체계적 검증 및 역량 있는 우수한 인력 임용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속초수련원 관련 5-1. 속초수련원 증축 전면 재검토 관련하여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속초수련원 증축은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은 속초수련원 증축을 반대하거나 호감도가 낮다는 편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올해 5월 125억 증액 관련 투자 심사에서 속초수련원 증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놓고,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맘대로 뒤엎는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보고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속초수련원 증축 사업과는 별개로 수련원 확충방안 및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실시('21. 9.) ○ (사업재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실시 ('22년) ○ (임차 추진) 속초수련원 증축 사업 외에 학술용역('21.12월) 결과에 따라 민간 휴양시설 임차하여 공급('22. 상반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임차 휴양시설 마련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지 답사 및 협상, 운영규정 마련 및 계약 : '22. 1~3월 ○ 시설 운영 : '22. 4월~
<p>5. 속초수련원 관련 5-2. 속초수련원 증축을 업무보고에 누락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아 행정국장 임의대로 백지화함. 속초수련원 증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통과시켰지만 결국 집행하지 않아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의 사업비 과다 증가 우려에 따라 직원 연수시설 확충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학술용역 실시('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결과 건립, 매입, 임대 방식 중 임대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도출되어 임대방식 추진을 위한 예산안 확정 ○ 속초수련원 증축 사업이 바로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향후 계속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방식에 대한 직원 여론, 내부 의사결정, 시의회 협의 등을 절차를 거쳐 속초 증축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코로나19 대응 관련 6-1.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시청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의원회관 1층 연금매점 커피숍의 경우 이용자들이 넘쳐나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감염확산의 우려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및 체온 측정계 설치 : '21.11.19.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방역수칙 이행 : 연중상시
<p>6. 코로나19 대응 관련 6-2. 코로나 분포와 관련하여 특히 집중·포화되는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행정국에서도 지원책들을 마련해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예방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 대상 방역수칙 안내 및 코로나19 검사 독려, “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취약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 <p>〈치료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생활치료센터 운영('21년 10월 3개소 확대)을 통해 외국인 확진자의 안정적 회복 지원 및 지역사회 전파 우려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센터) 은평, 태릉, 남대문 등 3개소 외국인 전담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내국인 환자 배정 병행 - (소통지원) 통역단말기 및 각 언어(15개 국어) 번역 안내문 비치 - (인력배치) 운영지원 용역사의 협조를 받아 영어, 중국어 등 최소한의 의사소통 가능한 지원인력 전면 배치 ○ 재택치료 안내 영상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부('22.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코로나19 대응 관련 6-3. 일상적 단계회복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방역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계획을 세우기 바람. (기획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 : '21.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시장), 부단장(행정1부시장) 등 ○ 「서울시 일상회복 민간자문단」 구성·운영: '21.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분야) 코로나19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 (민생 분야) 민간 전문가 POOL 운영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회의 운영(21회) ※ '22.1.4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계획 논의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요 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직영 검사소 확충 등 검사역량 확대 ▶ 병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 예방접종을 제고 ▶ 재택치료 관리인력 확충 및 이송체계 체계화 등 -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경제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부담·불편 없는 '4無 안심금융' 추가 공급 ▶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 상생상회 '전국 농특산물 특별전' 등 - 관광분야 경기회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쇼핑페스타 추진 ▶ 특구활성화 및 시민의 관광 기회 확대 등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방역체계 확립 - (진단검사) 고위험군 중심 PCR검사 및 자가검사키트 검사 도입 - (역학조사)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및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 조사 - (의료대응) 재택치료 내실화 및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 - (병상확보) 입원 필수환자 중심의 병상운영체계로 전환 - (백신접종) 3차접종 80% 조기완료 및 4차접종 계획수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코로나19 대응 관련 6-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서울시민의 신청률이 전국 최저이며, 대상자 중 14만 6천명이 미신청함.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지원금 미신청자 신청 독려 협조요청(市→區, '21.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미신청자 명단 주기적 제공(행안부→지자체) - 고령자, 거동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신청 적극 활용 - 신청률이 저조한 1인가구, 미성년 세대주 가구 신청 독려 - 보도자료, 홈페이지배너, SNS 등을 활용한 홍보실시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인용여부 판단을 위한 행안부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자치구 일자별 행안부 질의회신 요청('21.9.~11.) <p>※ 국민지원금 신청률 : 서울 97.7%, (전국 평균 98.5%)</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지원금 국·시비 정산('22년)
<p>7. 공무국외훈련 관련 7-1.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영어권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비영어권 국가로 확대·개선 대책 마련 필요.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어권 국가 확대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비영어권 3개국(일본,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22년 비영어권 10개국(독일, 스페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웨덴, 베트남, 페루, 덴마크) 으로 확대 - '비영어권 국가 학위과정 지원자 우선 선발'을 실시하여 총 3명(스페인 1, 스웨덴 1, 독일 1)을 신규 파견('21.7월~9월) - '22년 훈련기관에 남미 '페루 리마시청'을 신규 파견하여 비영어권 국가 확대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공무국외훈련 관련 7-2. 공무국외훈련 성과보고서 평가위원의 관리 감독이 안되고있음. 평가위원 명단, 경력, 지급된 금액 등 어떠한 자료도 없음. 자료제출 기간을 일주일 주었음에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국외훈련은 전액 예산삭감해야 함.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명단 등 요청자료 제출 완료('21. 11월) ○ 외부 평가위원 60% 이상 위촉 등 평가위원 다변화('21. 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관련 자료 수시 현행화 및 관리 철저 : 연중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1. 자치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신청 시, 사업 타당성, 사업별 우선 순위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하며, 특히 자치구의 사업선정과정에 예산부서의 검토, 서울시 사업관련부서의 의견조회 절차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등 중요사항 검토를 위한 사전 점검기준(체크리스트) 마련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전절차 검증 사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예산부서를 통해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물량·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 이행 여부 확인 후 신청 - 市 유관, 담당 부서에 사업 추진 관련 협의 및 의견조회 실시 여부 확인 후 신청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등 중요사항 검토를 위한 사전 점검기준(체크리스트) 강화 : '22.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계획」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전절차 검증 사항 중 ③항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물량·단가 적정성 여부, 시 관련 부서 의견조회' 절차 항목 신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8-2. 행정국 소관 1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 공백이 우려됨. 그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구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임.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음.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p> <p>(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 (개최현황) '95년 도입 후 조정신청 4건(심의대상 아님) ○ (타 시·도 사례) 미구성(7개), 미개최·임기만료(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제주 :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님 ○ (검토의견) 위원 위촉 전이라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자치구에 적극 홍보하여 조정신청시 위원회를 구성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쟁조정제도 자치구 대상 홍보(공문 발송) : '22. 2월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8-3. 조례, 규칙, 훈령 관련 정비 필요성 있음. 행정국 소관 조례의 인용법령 등의 정비 필요. 행정국 소관 47개 조례 중 6개 조례에서 띄어쓰기, 인용법령 등 오류가 발견됨. 행정국 소관 전체 법령 표기 오류 등 올바르게 정비하기 바람.</p> <p>(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례적으로 조례(6월), 규칙(12월) 일괄 정비를 통해 인용법령 현행화,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순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행정국 소관 10개 규칙 일괄 개정('22.1.13字)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 소관 조례·규칙·훈령 중 인용법령 오류, 용어 순화 등 일괄 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훈령 정비('22.5~6월), 규칙 정비('22.11~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8-4. 업무택시 이용시 접근이 용이한 부서에서만 이용하고 실제 현장출장이 잦은 사업 부서는 사용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음. 관용차가 많은 특정실국(행정국)이 업무택시 이용률이 높아 업무택시 이용이 각 실국별 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홍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의 경우 서울시정 전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단과 광장·청사방호 등 비상근무, 국정 감사 등 시 주요행사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 특성과 관련하여 업무택시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 부서인 시민건강국 및 타 실·국의 코로나 야간 점검 등 근무시간외의 이용률도 증가하여 행정국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 비율 : 23.7%(`19년) → 13.7%(`21년) ※ 업무택시 상위 이용 실국(`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건강국, 행정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안전총괄실 순임. ○ 현재 업무택시는 모바일 결제 앱(티머니비즈페이)을 통한 결제 방식을 채택하여 관내 출장시 필요한 직원은 언제든지 결제 앱 등록 요청 후 서울시내 모든 택시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 부서의 이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현장 출장이 잦은 사업부서의 경우 근무시간 내 출장시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을 배차하여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월말 현재 5,594명 등록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업무택시 이용이 각 실국별로 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목적 외에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규정 미준수시 매월 정산 시 이용요금 환수 조치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5. 찾동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저조함. 특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회복 시기에 맞게 보완하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 자치구 보조사업은(우리동네주무관, 자치구 주관교육)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 및 하반기 자체교육 실시로 '21.9월 기준 일부 자치구(종로, 관악) 예산 집행률 저조 ○ '21.12월 최종 집행결과 종로구 98%, 관악구 100%로 집행률 저조하지 않으며, 자치구별 예산 집행시기의 차이로 집행률 편차 발생 ○ 예산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자치구 실집행률 확인 및 집행 독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자치구 사업결과 보고 및 예산집행 정산('22.1월) ○ 코로나19 추이(단계적 일상회복) 반영하여 '22년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교부, 분기별 집행률 확인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6.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피로도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처방전 활용이 5년동안 31명으로 그쳤으며, 올해는 0건임. 활용이 저조한 휴식(휴식처방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휴식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새로운 방향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도가 쌓인 직원의 경우, 휴식처방전 없이도 1인당 6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 휴식처방전 발급 수요가 낮음 - 휴식권 이용인원(5년간 31명) : '16년 2명→'17년 4명→ '18년 11명→'19년 3명→'20년 11명→'21년 0명 ○ 힐링센터 쉽표 정신과 전문 상담 강화 통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지원 의료 기능 확대 추진 ※ 의료기관+상담심리업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채용 ○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으로 예방부터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건강 종합 서비스 추진 ※ 365일 콜센터 통한 건강상담제 도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서비스 수행 업체 선정 입찰공고 : '22. 2~3월 ○ 서비스 시행에 따른 직원 가입안내 및 이용: '22. 4~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8-7.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적 형태로써 수당과 대체휴무를 두고 있음. 당직(숙직+일직)의 경우에는 당직 후 수당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상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수당과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보상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근무와 비상근무는 적용 규정이 달라 보상체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비, 대체휴무는 <u>지자체 예산편성 기준(행안부), 시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지급</u> -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대체휴무는 <u>지방공무원 수당 및 복무규정(행안부)에 근거하여 지급</u> <table border="1" data-bbox="654 716 1433 1142"> <thead> <tr> <th>근무형태</th> <th colspan="2">보 상</th> <th>적용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당직근무</td> <td>당 직 비</td> <td>6만원</td> <td>「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td> </tr> <tr> <td>대 체 휴 무</td> <td>1일 (10일내사용)</td> <td>「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td> </tr> <tr> <td rowspan="2">비상근무</td> <td>초과근무수당*</td> <td>실적분 (1일4시간)</td> <td>「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2p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2p</td> </tr> <tr> <td>대 체 휴 무 *</td> <td>1일 (6주내 사용)</td> <td>「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2p</td> </tr> </tbody> </table> <p>* 초과근무(4시간)과 대체휴무 중 택1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시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무를 함께 지급하기 위하여는 관련 규정* 개정 건의(→행안부) 필요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규정 개정 건의 : '22년 상반기 중 	근무형태	보 상		적용 규정	당직근무	당 직 비	6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대 체 휴 무	1일 (10일내사용)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실적분 (1일4시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2p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2p	대 체 휴 무 *	1일 (6주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2p
근무형태	보 상		적용 규정																
당직근무	당 직 비	6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6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대 체 휴 무	1일 (10일내사용)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실적분 (1일4시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2p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2p																
	대 체 휴 무 *	1일 (6주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지방공무원 복무예규」 12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8. 서울시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뱅크 재구성 후 인력풀 보완이 되지 않아 대체인력이 필요한 실국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인식되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바, 대체인력뱅크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출산휴가자 등에 의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을 운영하고 있고 부서에서 요청 시 즉시 배치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뱅크의 경우 정보화, 사회복지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여 인력뱅크 유지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적합한 필요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낮은 인력뱅크를 보완하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한시임기제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결원이 발생한 부서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9. 행정국 용역계약을 보면 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타 견적 업체가 모두 같음. 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타 견적 업체는 의류, 패션, 잡화 업체임. 회사 대표가 다른 업체 2곳을 만들어 계속해서 같은 용역들을 받고 있음 (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용역계약 추진 시 다양한 비교 견적업체와 가격 비교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양한 업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여러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10. 퇴직공무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의 수혜대상자이니 시민들에게 해당 일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질의했으나 조치사항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질 못함. 조치해 주기바람 (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무원 참여 청사 안내데스크 운영’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안내데스크에 배치하여 청사 방문시민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내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市 출신 퇴직자 및 PC 활용 외국어 회화 가능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팅 운영’은 민원응대 및 단순반복 업무 수행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과중 및 업무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업무 몰입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사업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퇴직공무원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행정 경험이 뒷받침되어 시정모니터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모니터링 사업과는 차별화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사업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시정 민원 응대가 가능하지만 일반시민은 동기간 내 행정 이해도를 높여 민원인 응대 및 모니터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시민의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8-11.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면 징계가 매우 약함. 금품수수, 성비위임에도 감봉 등은 적절한 처벌이 아님. 공직자로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행정국에서 이러한 징계사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비위조서 등 조사자료, 피해자 및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 징계요구권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또한, 우리시는 그간 「음주운전 중징계 대상자 인사조치 강화계획 (‘20.9.1.)」 및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21.10.18.)」 등을 수립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해 직무배제, 승진제한 등 인사상 조치를 강화한바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8-12. 서울시 정보공개율은 전국 최하위였으나,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개방형으로 과장을 임명한 후 정보공개율은 압도적인 최우수였음. 작년 8월 정보공개정책과장을 개방직제에서 일반직제로 바꾸면서 정보공개율이 압도적인 최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앉음.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첫 조치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 요구 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에서도 명단 공개를 거부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이 퇴행하지 않도록 명단을 공개하기 바람 (정보공개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보공개평가 결과는 '20년 87.54점에서 '21년 92.38점으로 4.84점 상승하였음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담당 부서인 권익보호담당관에서 부분공개 결정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 : 성희롱·성폭력 심의 업무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바 공개 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부분공개 ※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위원회 ○ '21.11월 시민 알 권리 향상을 위해 정보소통광장에 위원 명단 게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8-13. 엄밀한 전력거래소 기본 정산금(DR) 추계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p> <p>- 세입예산 시청사 아낀전기 판매수입(DR : 수요반응자원)을 2천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정수율이 54%밖에 안됨. 그 이유가 지금 DR 시장의 정산금 기본단가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바람 (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사 수요자원거래(아낀전기 판매)는 국가 전력 예비율 부족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블랙아웃)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을 '전력공급'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수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임(전력시장운영규칙) ○ 아낀전기 정산현황(4년간) <table border="1" data-bbox="592 667 1444 857"> <thead> <tr> <th>구 분</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액</td> <td>22,420천원</td> <td>20,257천원</td> <td>20,727천원</td> <td>13,631천원</td> </tr> <tr> <td>결산액</td> <td>22,605천원</td> <td>22,251천원</td> <td>17,592천원</td> <td>-</td> </tr> <tr> <td>정수율</td> <td>100.8%</td> <td>109.8%</td> <td>84.8%</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보고당시 9월까지 정산금액은 11,361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54%이나, 12월까지의 정산금은 84.8%임 ○ 시청사 아낀전기 판매수입(DR 기본정산금) 감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력수급이 원활하여 전력예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력 거래소에서 거래용량이 1MW(중·소형) 이하는 기본 정산금을 매년 낮추고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592 1151 1444 1245"> <thead> <tr> <th>구 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r> </thead> <tbody> <tr> <td>정산금단가</td> <td>37,085원/kW</td> <td>29,320원/kW</td> <td>25,000원/kW</td> </tr> </tbody> </table> <p>※ 시청사 거래용량 : 600kW</p>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22,420천원	20,257천원	20,727천원	13,631천원	결산액	22,605천원	22,251천원	17,592천원	-	정수율	100.8%	109.8%	84.8%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산금단가	37,085원/kW	29,320원/kW	25,000원/kW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22,420천원	20,257천원	20,727천원	13,631천원																									
결산액	22,605천원	22,251천원	17,592천원	-																									
정수율	100.8%	109.8%	84.8%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산금단가	37,085원/kW	29,320원/kW	25,000원/kW																										

건의 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인사 관련</p> <p>1-1. 전문관제도 관련 주요의견이 부정적인데,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인가 내부적으로 형평성 안 맞는다는 불만 때문인지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격무기피부서 중심으로 배정 되는데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모순됨. 전국적으로 같은 평가로 운영 된다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사·승진문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해도 공정 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문관 제도는 '14년 서울시 인사혁신에 따라 '20년까지 전문관 1,000명 목표를 설정·운영하다,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목표를 '20년까지 400명으로 조정·운영해왔음 ○ 이후,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3년 이상 전문관에 가산점을 의무 부여'하도록 개정('22.1월 시행)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20.10.~12.)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설문조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운영에 대한 만족도 : 만족 21.9%, 불만족 57.5% · 전문관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 : 과도 66.9%, 적정 29.4% · 제도개선 방식 : 현재 전문직위 일괄폐지 후 재선정 60.6% </div> ○ 그 결과, 그간 운영중인 전문직위를 일괄폐지 후 격무·기피 분야 중심으로 전문직위를 재선정·운영하자는 다수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영 중이던 443개 직위를 '21.5.31.자 일괄 폐지하였고 ○ 격무·기피분야 중심으로 전문직위를 재지정(9개, 지정일 : '21.10.25.)해 전문관 5명을 선발('22.1.17.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p>※ 기타 개선사항 : 가산점 부여(신설), 수당 하향조정, 전문관 관리감독 강화 (연 1회 평가 후 70점 미만자 직권해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인사 관련 1-2. 찾동 사회복지직렬 대량 선발에 의한 인사적체 문제 심각하니 해소 방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 시행시 단기간 인력충원으로 인해 부득이 승진적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자치구 직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권은 자치구 고유권한으로 자치구별 직급별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인사적체 해소 노력하고 있음 ※ 인력채용에 따른 승진적체 문제해소는 일정기간 소요 불가피 ○ 전 자치구 찾동 인력운영 현황 및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모니터링 진행 중('21.12월~'22.1월)에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 인력현황 모니터링 결과분석 내용 자치구 공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 권고('22.2월)
<p>2.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 2-1.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주민 자치회 보조금 점검을 했어야 함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사업단에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집행 점검을 이유로 2020년에 이미 통과된 예산을 교부중지 하거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됨.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실시한 보조금 집행점검은 '17년 시범사업 시행 이래 첫 점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환수 등 제재보다는 계도에 집중 ○ '21년 신규 확대예정동(80개동) 예산지원 유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규모 초과달성, 사업평가 부재 및 입법 필요성을 근거로 결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밀한 사업평가를 통해 주민자치 발전방향 마련('22.2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기본과제로 추진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2-2. 사회 초년생이라 생활이 어려운 신규직원이 많다고 하므로 신규직원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무주택 공무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발 배점 기준도 신규직원, 다자녀 공무원의 배점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바람.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 융자지원시 신규임용직원 선발비율은 '20년 15%에서 '21년 20%로 확대하여 신규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전세자금 융자지원시 다자녀(3자녀 이상)직원 선발비율은 5%이나 '21년에는 신청자가 미달되어 추가 확대는 어려움 ○ '22년 전세자금 지원자 선정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5천만원→1억원)하여 1인 가구가 많은 신규직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 '21년 3차(12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p>2.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2-3. 통장협의회 입회비는 통장협의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투명성차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음. 또한 통장협의회별 입회비가 20~50만원으로 차이가 커 계도가 필요해 보임.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차원에서의 대응 요망함.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협의회 입회비 현황 파악('2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협의회는 친목도모 등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적모임 - 입회비 납입금액은 최소 1만원 ~ 최대 34만원으로 다양함 - 입회비 납입목적은 경조사비, 친목도모, 전별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21년 행정사무감사(통장협의회 입회비) 건의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자치구별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기타 행정국 소관 사항</p> <p>2-4. 한 업체가 서울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와 13번, 65억원을 계약함. 영상제작, 조사연구 용역, 특별전시회 등 다른 업무임에도 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타 견적이 모두 동일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기록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체와 계약한 13건의 사업은 모두 경쟁입찰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8건은 단독 응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정책과 5건(수의계약 3건), 서울기록원 8건(수의계약 5건) ○ 기록관리 분야 전문 업체가 적어 경쟁입찰을 진행해도 동일 업체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비교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역시 소수여서 전문성을 보유한 제한된 업체의 타 견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관련 유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경쟁입찰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시청어린이집 교직원 실제 연수 내역(예산 및 장소 포함) (인력개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2.)
○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률 자료 (자치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 현장위기 신속대응 광역 건설팅단 운영 구성 현황 (프로필 등) 자료 (자치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 청사외벽 리모델링 계획 수립 부터 현재까지 현황, 태양광 설치 등 사업현황 일체. 업체 선정 현황 자료 (총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 생활치료센터 일별 도시락 폐기 건수 (인력개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9.)
○ 시장 취임 이후 지시사항 (총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022년 변화된 내역 및 조직과와 협의한 내용 <p>(인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교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자치구 신청내역 및 교부 내역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수석 및 민생특보 채용 절차와 관련 인사위 회의록 <p>(인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개선을 위한 3차례 간담회에 대한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p>(5/4, 5/24, 6/15, 8/25) (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사업결과보고서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자치구별 산출내역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 전체 직원 현황 <p>(인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최종 신청현황 - 이의신청 심사기준 또는 규정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 주민자치위원회 일제 실태 점검 - 6월부터 실시한 주민자치 실태점검보고서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지방정부의 선거비용 전액 부담 근거 및 시비 과다 추계시 향후대책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8.)</p>
<p>○ 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 의제 기부금액 처리 현황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8.)</p>
<p>○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권익보호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4.)</p>
<p>○ 서울시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총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8.)</p>